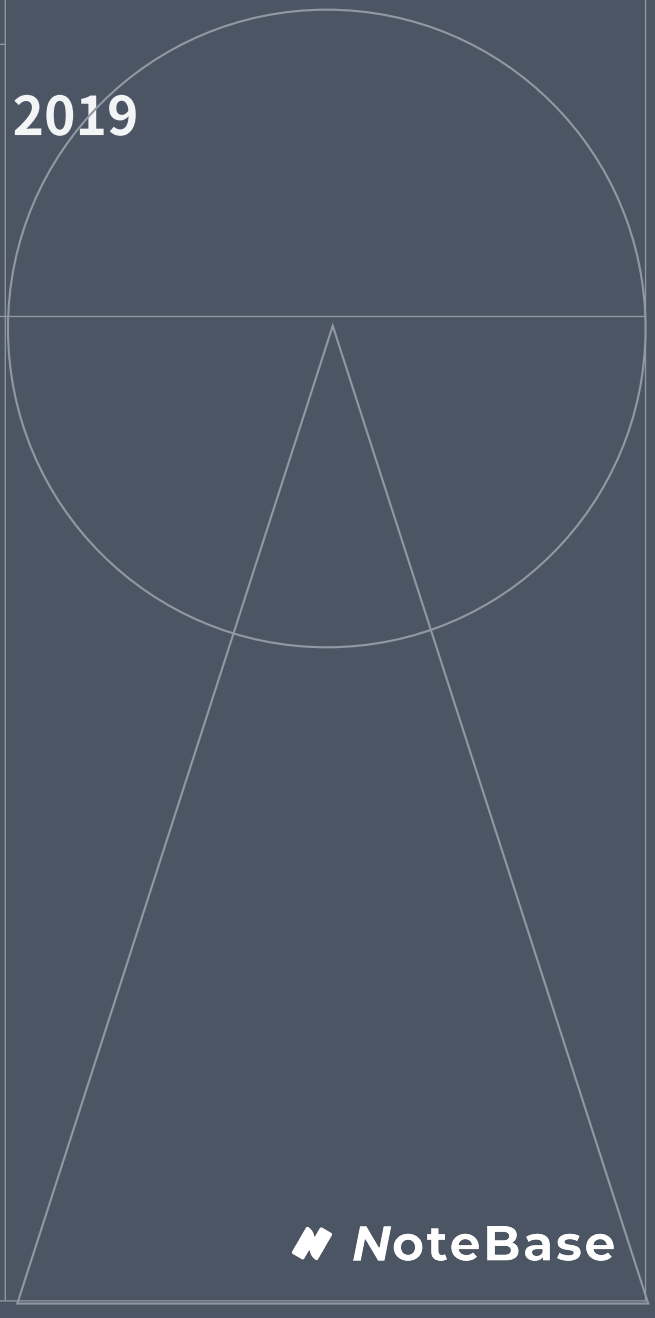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19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19

문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므로,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② O: 선상투표는 원양어선 선원 등 선박에 승선하여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요건을 갖춘 선원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투표신고를 하여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③ O: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정당에 투표하며, 그 정당투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는 각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선출하는 방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④ X: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절대다수대표제'를 **상대다수대표제**로 고쳐야 한다.
절대다수대표제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지만, 상대다수대표제는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 되므로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세 후보자의 득표율이 각각 40%, 35%, 25%라면 과반수에 미달한 40% 득표자가 당선된다.

NoteBase

문 2. (가)~(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권리의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의 '일반 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로, 루소 사상의 핵심이다. 루소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입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자연 상태를 끝없는 투쟁과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상태로 본 홉스의 사상이다. 홉스는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여 강력한 주권자를 세운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대군주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력한 절대 권력의 정당화**를 주장한다.

② O: (나)는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한다고 본 루소의 사상이다. 일반 의지는 개인의 사익을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③ X: (다)는 자연 상태가 대체로 평화롭지만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므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본 로크의 사상이다. 로크에게 정부는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그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④ X: (다)의 로크는 정부의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반면 (가)의 홉스는 사람들이 권리를 양도하여 세운 주권자에게 강력한 권력이 있다고 보므로, 두 사상이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주권론을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의 루소와 (다)의 로크**이다.

NoteBase

문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②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③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럽연합은 경제 통합뿐 아니라 정치·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이 유럽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과 활동의 기능적 범위가 넓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들이 구성한 지역적 국제기구이지만, 활동 분야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 등으로 넓다. 따라서 지리적 범위는 지역적이어도 기능적 범위는 **포괄적**이다.

② X: 국제연합은 국가들이 구성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이므로, 두 기구를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 없다.

③ X: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투자·고용·무역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해당한다.

④ X: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는 국가와 국제기구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개인**도 포함된다. 전직 국가원수는 국제 분쟁의 중재나 평화 활동을 통해, 저명 예술가는 국제적 문화 교류나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NoteBase

문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탄핵소추권**이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회에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하여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O: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적의원은 국회에 현재 소속된 전체 의원을, 출석의원은 실제 회의에 출석한 의원을 뜻하므로 두 요건의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재의결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법률을 확정할 수 있다.

③ O: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한다.

④ X: 국회가 가지는 것은 탄핵심판권이 아니라 **탄핵소추권**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NoteBase

문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헌법이 부인하는 것은 '일체의 전쟁'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이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국제평화주의의 지향**을 나타낸다.

② X: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적 전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체의 전쟁'을 '침략적 전쟁'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는 외국인을 대우할 때에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④ O: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해당 국제규범을 국내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국제법 존중의 태도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혼인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을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부하였다. 갑과 을은 재판을 거쳐 이혼하였다.

①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부정행위 등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지만,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협의이혼의 절차**에 적용된다(민법 제836조의2).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의사를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는 제도이다. 갑과 을은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거쳐 이혼했으므로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X: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이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과 달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따라서 갑도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O: 갑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 을은 갑의 잘못으로 이혼하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④ O: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도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NoteBase

문 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는(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보기>
ㄱ. 형사소송법
ㄴ. 근로기준법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ㄹ. 민법
ㅁ. 국가배상법
ㅂ. 소비자기본법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ㅁ, ㅂ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적 거래를 당사자의 자유에만 맡길 때 생기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 **사회법**이다. 근로자 보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여기에 포함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가)는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이 있다.

ㄱ. 형사소송법 — 공법: 범죄의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사적 경제관계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사회법과 구별된다.

ㄴ. 근로기준법 — 사회법: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노동법이다. 근로계약을 당사자의 자유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사회법에 해당한다.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회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법이다. 국가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시장 질서의 문제를 바로잡는다.

ㄹ. 민법 — 사법: 개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 사법으로 분류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과 구별된다.

ㅁ. 국가배상법 — 공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율한다. 국가의 공적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루므로 공법으로 분류한다.

ㅂ. 소비자기본법 — 사회법: 소비자의 권리와 국가·사업자 등의 책무를 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경제법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당사자의 자유에만 맡기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ㄴ·ㄷ·ㅂ이며, 이 조합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2019고합◎◎◎
신청인 홍길동

신청 취지
“○○법 제△△조 제△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 생략 —

2.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 생략 —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인 홍길동(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홍길동이 법원에 낸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달라는 제청신청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신청서의 수신처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홍길동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지** 결정하는 기관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심판을 제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② O: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신청인 홍길동도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③ X: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제청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X: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앞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칠 필요는 없다**. 제청신청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하는 신청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별도의 제도이며, 제청신청의 선행 절차가 아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NoteBase

문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② 형사보상제도
③ 국가배상제도
④ 배상명령제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기로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받을 수 있다. 갑은 을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200만 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 해설

배상명령제도는 사기죄 등 법률이 정한 범죄의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갑이 사기로 잃은 200만 원은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이고, 가해자인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있다. 따라서 갑은 을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을에게 형벌이 선고되는 것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은 을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명하는 절차**이다.

NoteBase

문 10. (가)~(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가)~(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다)의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요구를 제출하여 권리의 보호와 구제를 구하는 **청구권**에 속한다.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쓰이므로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으려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X: (나)의 공무담임권은 공직을 맡아 국가의 의사 형성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보장된 권리**이다.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③ O: (다)의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의견이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국가에 권리의 보호나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원을 통해 권리 침해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청원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X: (가)~(다)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표현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NoteBase

문 1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A라고 한다면,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B라고 한다.

<보기>
ㄱ. A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B의 총합이다.
ㄴ. B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ㄷ. 사회 변화에 따라 B는 A가 되기도 한다.
ㄹ. B는 A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일부 집단이 공유하던 하위문화도 사회 변화로 널리 확산되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하위문화 중에는 주류 문화의 가치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반문화**도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주류 문화이고, B는 한 사회 안의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하위문화이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범위이다.

ㄱ. X: 주류 문화는 **다수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를 뜻하며, 하위문화들을 모두 합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한 사회의 전체 문화에는 주류 문화와 여러 하위문화가 함께 존재한다.

ㄴ. X: 하위문화는 지역·세대·직업 등 집단마다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를 보여 주므로,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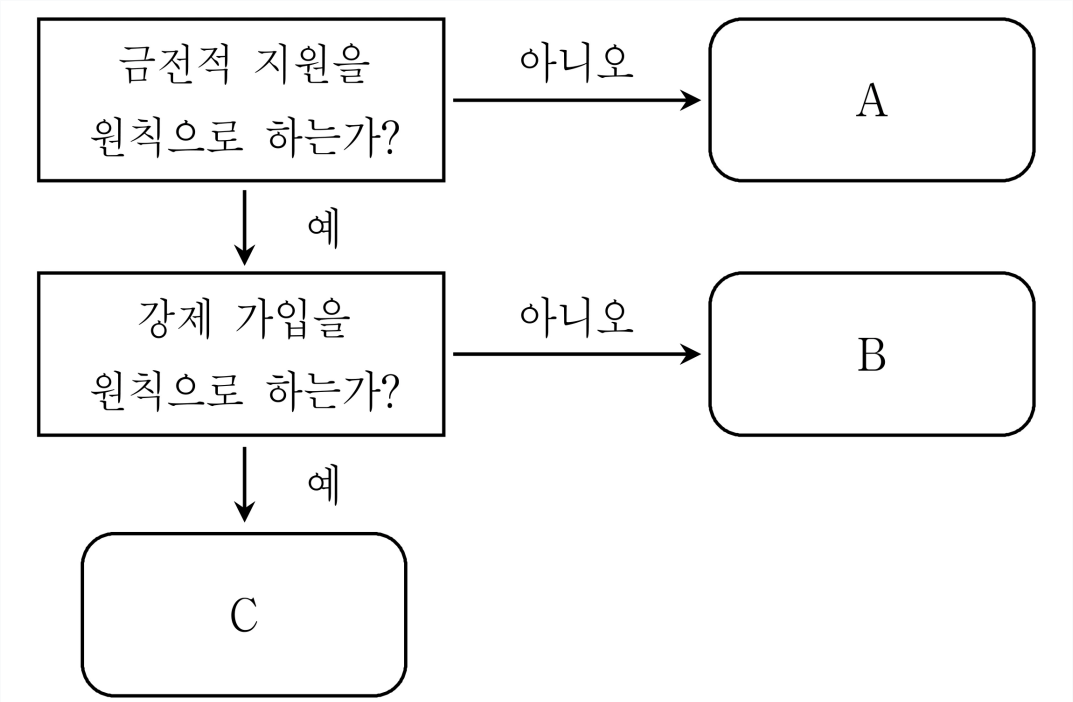
ㄷ. O: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의 구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집단이 공유하던 문화가 사회 변화에 따라 널리 확산되어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하게 되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ㄹ. O: 하위문화는 주류 문화와 공통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주류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하위문화**를 반문화라고 한다.

옳은 보기는 ㄷ,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①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②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③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C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험**으로, 가입자·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A는 사회 서비스이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두 제도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B는 공공 부조,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C는 사회 보험이다.

① O: A인 사회 서비스는 현금 지급보다 **상담·재활·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② O: B인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렵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C인 사회 보험은 법정 가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므로, 공공 부조는 사회 보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③ O: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사회 보험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효과는 **공공 부조보다 작다**.

④ X: C인 사회 보험은 **가입자·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B인 공공 부조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생산 방식	(가)	소품종 소량 생산	(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	+++	++
사회의 다원화 정도	++	+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	++	+++	+

※ +가 많을수록 정도가 크다.

①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 > A > B 순으로 나타난다.

④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낮은 A는 산업 사회이고,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B는 농업 사회이다. 산업 사회는 **노동력과 자본**이, 농업 사회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가 많을수록 해당 특성의 정도가 크다. B는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높으므로 농업 사회이다. A는 공장 중심의 생산으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낮은 산업 사회이다. C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가장 높고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작은 정보 사회이다.

① O: 산업 사회 A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설비 등 자본을 이용하여 공산품을 생산하므로 노동력과 자본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농업 사회 B에서는 토지를 경작하는 데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② X: 농업 사회 B는 농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므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다. 정보 사회 C에서는 지식·정보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이 중요해지지만, 이미 발달한 제조업도 유지된다. 따라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보다 C가 크다**.

③ X: 농업 사회에서는 좁은 지역 안에서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비중이 높다.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매체를 통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난다. 따라서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B > A > C** 순이다.

④ X: 산업 사회 A에서는 표준화된 제품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므로 (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정보 사회 C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생산하므로 (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NoteBase

문 14.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나)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가)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나)로 접근할 수 있다.

①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②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③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④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일반적인 경향성과 이론을 찾는 (가)는 **양적 연구**,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는 (나)는 질적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변수 간 관계를 수량화하고 가설을 검증하므로 **인과관계의 설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이론을 발견하려는 양적 연구이고, (나)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와 동기를 깊이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이다. 제시문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성 발달 간 상관관계 연구는 양적 연구에,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① X: 일기·편지처럼 개인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것은 **(나)의 질적 연구**이다. 이러한 자료는 행위자가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의 양적 연구는 통계 분석이 가능한 수량화된 자료를 중시한다.

② X: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행위에는 주관적 의미와 의도가 있으므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은 (가)의 전제이다.

③ O: (가)는 변수 간 관계를 수량화하고 가설을 검증하여 일반적인 규칙성을 찾으므로, 행위자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다만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더 중시하는 것은 **(가)의 양적 연구**이다.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규정하는 것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개념을 수량화하여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NoteBase

문 15. (가) ~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일탈자가 되기도 한다.
(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사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수단을 사용한다.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괴리되는 경우에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
(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재소자들의 도덕적 저항감이 이완되기도 한다. 또한 재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 이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③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의 낙인 이론은 행동 자체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일탈로 규정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같은 행동도 사회나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고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주목하는 낙인 이론이다. 일탈 여부가 행동 자체의 고정된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규정과 사회적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므로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② X: (가)의 낙인 이론은 개인과 주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이다. (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주는 압력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며,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적 관점**에 속한다.

③ X: (다)는 재소자들이 동료들과 접촉하면서 범죄 기술과 일탈에 우호적인 태도를 배우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일탈의 원인을 규율의 부재가 아니라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에서 찾는다. 욕구와 행동을 조정할 사회 규범이 없거나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져 일탈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한다.

④ X: 일탈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되고 반복되는 과정**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다)의 차별 교제 이론이다. 제시문에서도 동료 재소자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운 뒤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나타난다. (가)는 일탈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과 그에 따른 일탈의 지속에, (나)는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 사이의 구조적 괴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가), (나)가 (다)보다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는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6.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②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탄력적이므로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일정한 **가격탄력성 0**인 경우이다.

선지별 해설

가격탄력성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① O: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을 절댓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탄력성이 0인 완전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요량을 수평축, 가격을 수직축에 표시하면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②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는 완전탄력적 수요이다. 수요량을 수평축, 가격을 수직축에 표시하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달라지는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선지의 '수직'은 '수평'으로 고쳐야 한다. 수직선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일정하여 탄력성이 0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O: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가격 변화에 공급자가 공급량을 얼마나 민감하게 조정하는지를 나타내며, 공급량 변화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가격 변화에 대한 비율로 반응 정도를 측정한다.

④ O: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다. 즉,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1% 상승하면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표는 각 국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0개	80개
을국	90개	60개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③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frac{11}{15}$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④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Y재 $\frac{2}{3}$개, 갑국이 Y재 $\frac{4}{5}$개이다. 교역비율인 Y재 $\frac{11}{15}$개는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을국은 X재를 수출하고 갑국은 이를 수입하여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같은 양의 생산요소로 갑국은 X재 100개 또는 Y재 80개를, 을국은 X재 90개 또는 Y재 60개를 생산한다. 한 재화 1개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이며,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① X: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frac{80}{100} = \frac{4}{5}$개, 을국이 Y재 $\frac{60}{90} = \frac{2}{3}$개이다. 따라서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② X: 갑국은 같은 양의 생산요소로 두 재화를 모두 더 많이 생산하므로 두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다. 그러나 X재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낮다.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X재 $\frac{100}{80} = \frac{5}{4}$개, 을국이 X재 $\frac{90}{60} = \frac{3}{2}$개이므로 Y재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낮다. 비교우위는 갑국에 Y재, 을국에 X재로 나뉘며, 각자 비교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③ O: X재 수출국인 을국은 X재 1개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재 $\frac{2}{3}$개보다 많이 받아야 이득이다. 수입국인 갑국은 X재 1개를 직접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재 $\frac{4}{5}$개보다 적게 지급해야 이득이다. 제시된 교역비율은 $\frac{2}{3} < \frac{11}{15} < \frac{4}{5}$를 충족하므로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 교역**이 가능하다.

④ X: 특화 방향이 서로 뒤바뀌었다.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생산하므로 **갑국은 Y재, 을국은 X재**에 특화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GDP와 명목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GDP	100	110	100
명목GDP	100	110	110

①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②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③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④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질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생산량을 평가하므로 **생산량의 변화**를 보여 준다. 실질GDP가 2016년 100억 원에서 2017년 110억 원으로 늘었으므로, 2017년 생산량은 2016년보다 10% 증가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실질GDP는 기준 연도인 2016년의 가격으로, 명목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생산량을 평가한 금액이다.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므로 실질GDP의 변화는 그 재화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다. 물가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GDP 디플레이터로 비교하며, 기준 연도인 2016년의 값은 100이다.

① X: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frac{110}{110} \times 100 = 100$이다. 2016년과 같으므로 물가는 상승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았다**. 명목GDP가 늘었더라도 실질GDP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물가 상승을 뜻하지 않는다.

② O: 실질GDP가 2016년 100억 원에서 2017년 11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생산량 증가율은 $\frac{110-100}{100} \times 100 = 10\%$이다.

③ X: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frac{110}{100} \times 100 = 110$이다. 2016년의 100보다 높으므로 물가는 하락한 것이 아니라 **10% 상승하였다**.

④ X: 실질GDP가 2017년 110억 원에서 2018년 1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준 연도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생산량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다**. 두 해의 명목GDP가 110억 원으로 같아도 생산량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9.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고 고용률이 60%인 국가의 실업률은?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실업자의 비율을 구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를 이용하면 실업률은 $\frac{80-60}{80} \times 100 = 25\%$이다.

계산 과정

1. 기준 인구와 인구 구분: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계산을 위해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80%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80명이고 고용률이 60%이므로 취업자는 60명이다.

2.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80명에서 취업자 60명을 빼면 실업자는 80 − 60 = 20명이다.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20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실업자 수에 더하지 않는다.

3. 실업률 계산: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므로 $\frac{20}{80} \times 100 = 25\%$이다. 15세 이상 인구 100명을 분모로 삼으면 실업률이 아니라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구하게 된다. 계산한 실업률 25%는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연도 / 소득 구간	2017년	2018년
2,000만 원 이하	5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5 %	20 %
5,000만 원 초과	35 %	30 %

※ 소득세 부과 방식: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증가하였다.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연간 소득 3,000만 원에는 **구간별 세율을 나누어 적용**한다. 첫 2,000만 원에 대한 세금 증가분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감소분보다 커서, 소득세액은 2017년 350만 원에서 2018년 400만 원으로 50만 원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연간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소득에 해당 연도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한다. 아래 계산에서 금액의 단위는 만 원이다.

① X: 2017년의 구간별 세율은 5%·25%·35%, 2018년은 10%·20%·30%이다. 두 해 모두 높은 소득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이다. 비례세제라면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② X: 연간 소득 2,000만 원은 전액 첫 구간에 속한다. 소득세액은 2017년 2,000 × 5% = 100, 2018년 2,000 × 10% = 200이다. 2017년 세액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은 $\frac{200-100}{100} \times 100 = 100\%$이므로 **세액은 100% 증가**하였다. 세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 것은 5%p 상승이다.

③ O: 연간 소득 3,000만 원 중 첫 2,000만 원과 이를 초과한 1,000만 원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소득세액은 2,000 × 5% + 1,000 × 25% = 350이고, 2018년은 2,000 × 10% + 1,000 × 20% = 400이다. 첫 구간의 세금은 100만 원 늘고 두 번째 구간의 세금은 50만 원 줄어, **전체 소득세액은 50만 원 증가**하였다.

④ X: 연간 소득 6,000만 원의 2018년 소득세액은 첫 2,000만 원, 다음 3,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세액은 2,000 × 10% + 3,000 × 20% + 1,000 × 30% = 1,100이다. 연간 소득 2,000만 원의 세액은 200이므로 세액의 비율은 $\frac{1100}{200} = 5.5$이다. 따라서 소득은 3배이지만 **소득세액은 5.5배**이다.

NoteBase